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스위스, 2018년 12월 남녀임금평등법 의회통과¹⁾

본 법안은 처음 의회에 상정된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하원에서 99명 찬성, 88명 반대, 4명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상원에서는 2018년 5월 이미 통과됐었지만 하원에서 반년 넘게 난항을 겪었다. 가장 진통을 겪었던 부분은 바로 남녀임금격차 조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보수정당들은 본 법안에 반대하면서, 특히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에서 제안한 이전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기업들은 모두 4년마다 임금 평등성 분석을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던 내용이, 보수정당의 반대로 결국 이전 조사에서 남녀 임금이 평등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이후 다시 조사 및 공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수정되었다.

• 참고문헌 •

Swiss Info (2018), "Swiss parliament passes salary equality law," 2018년 12월 4일자, https://www.swissinfo.ch/eng/politics/equal-pay-for-equal-work_swiss-parliament-passes-salary-equality-law/44592792 (접속일자: 2019년 1월 11일)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박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영국, “여성 혐오도 혐오 범죄에 포함” 움직임 확산²⁾

영국에서는 ‘여성 혐오(misogyny)’를 혐오 범죄(hate crime)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크레스다 덕 런던경찰청장(Metropolitan police commissioner)에게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경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혐오 범죄만큼이나 여성만 공격하는 성별 혐오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이다.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1998 범죄장애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28~32항과 2003 형사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145항, 146항에 각각 명시돼 있는데, 영국 경찰과 검찰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장애, 성전환자 신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 혐오 범죄로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내용을 근거로 영국 경찰과 검찰은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로 분류하지 않는다.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에는 국회의원 조 스윈슨, 스텔라 크레이지, 피터 보텀리와 전 내무장관인 자키 스미스와 영국 노팅엄셔 주(County)의 자치경찰위원장인 패디 티핑이 서명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Citizens UK와 Women’s Aid, the Fawcett Society도 함께 서명에 참여했고, 이 서한은 덕 런던경찰청장과 새라 손튼 영국 경찰서장 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NPCC) 의장에게 발송됐다.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많은 여성이 길거리나 온라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성추행에 노출되지만 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the Fawcett Society의 샘 스메더스 대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혐오는 여성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뿌리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혐오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성을 노리는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문헌 •

The Guardian(2019). “Campaigners and MPs call for misogyny to be made a hate crime”, (2019년 1월 14일자),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an/14/campaigners-and-mps-call-for-misogyny-to-be-made-a-hate>(접속일자 2019년 1월 29일)

2) 작성: 황수영(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Metropolitan Police (2019). "What is hate crime?",
<https://www.met.police.uk/advice/advice-and-information/hco/hate-crime/what-is-hate-crime/>(접속일자 2019년 1월 29일)
CPS(2019) "Hate crime", <https://www.cps.gov.uk/hate-crime>(접속일자 2019년 1월 29일)
BBC(2016) "Nottinghamshire Police records misogyny as a hate crime"(2016년 7월 13일자)
<https://www.bbc.com/news/uk-england-nottinghamshire-36775398>(접속일자 2019년 1월 29일)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젊은 여성, 불안 장애와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 군"이라고 정부 연구보고서 공개³⁾

여성의 정신건강과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춘 영국 정부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대책 위는 보고서를 통해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 여성은 26%가 불안 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지만, 같은 나이 또래의 남성 중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은 전체의 9.1%에 불과하다"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여성의 25.7%가 자해(self-harm)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2배가량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여성 중에서도 인종별로 정신건강 정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했는데,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진 백인 영국 여성은 20.9%, 비영국인 백인 여성은 15.6%였지만, 흑인 영국 여성은 29.3%로 세 그룹 중 가장 높았다. 소득 정도와 사회 경제적 수준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했다. 또 가난에 시달리는 여성(29%)이 그렇지 않은 여성(16%)보다 정신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18년 12월 '여성 정신건강 대책위원회 최종보고서(The Women's Mental Health Taskforce Final report)'를 발간해 남성보다 여성이 정신장애 유병율이 높고, 따라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세분화된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참고문헌 •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18) "The Women's Mental Health Taskforce Final repor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65821/The_Womens_Mental_Health_Taskforce_-_final_report1.pdf(접속일자 2019년 1월 14일)

3) 작성: 황수영(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과정)

캐나다, 양육 분담 육아 휴직 제도 실시⁴⁾

캐나다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가 실시된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평균 55%의 임금을 보존해 주면서 최장 35주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데, 이 35주는 부모가 양자 간에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양육의 주 담당자로서 여성이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2018년 기준 캐나다 육아휴직 신청자의 85%가 여성이고,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남성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자적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는데, 퀘벡주의 경우 2016년 캐나다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남성의 80%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학계와 언론에서는 퀘벡 모델을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는 퀘벡주의 육아휴직 제도를 모방하여 기존의 35주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대신 양쪽 부모 모두가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설계되었다.

또 개편안은 2019년 3월 17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이성 혹은 동성 커플에게 육아휴직을 5주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대신, 추가된 5주는 커플이 나눠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커플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35주에서 40주로 늘어나지만 커플 어느 한 쪽이 35주 이상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40주의 육아휴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5주는 반드시 다른 한 쪽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커플이 연장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의 61주에서 69주로 늘어나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육아 휴직 기간의 총 합이 61주를 넘길 수 없다. 다시말해 앞으로 한쪽 부모가 최소 5주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만 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퀘벡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2018년 9월에 발표하였고, 2019년 6월에서 제도 시행을 3개월 앞당김으로써 3월부터 24,000명 이상의 부모들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참고문헌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Canada's New Parental Sharing Benefit,

https://www.fin.gc.ca/n18/docs/18-008_6-eng.pdf

CTV News, 'Use-it-or-lose-it' extended parental leave coming in 2019,

<https://www.cbc.ca/news/politics/parental-ei-leave-benefit-march-2019-1.4839097>

4) 작성: 김양숙(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스웨덴, 미투(#Metoo)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리고 큰 변화⁵⁾

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유명 칼럼니스트와 인기 방송인의 성범죄 사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알려지면서 촉발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이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정도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피해 사실의 공유를 넘어 각계각층 여성들의 사회적 연대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미투 가해자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관련 사회 제도까지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스웨덴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존의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각 기관 차원에서 성평등 조치 및 윤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 참고문헌 •

<https://mfj.se/>

<https://www.thelocal.se/20171124/what-does-the-metoo-campaign-tell-us-about-swedish-feminism>

<https://www.thelocal.se/20181125/swedish-school-puts-metoo-on-the-curriculum>

<https://www.thelocal.se/20181210/one-year-on-what-did-metoo-achieve-in-sweden>

Sifo (2018.10), Ett år #Eftermetoo (en sifo-undersökning om Mäns attityder till #metoo-upproren) Diskrimineringslag, 2008:567

독일, 미투 운동이 베를린영화제에 가져온 변화-“여성감독 작품 수 증가”⁶⁾

1년 전인 2018년 2월, 베를린영화제 기간에는 ‘미투(MeToo)’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졌다. 영화 및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500명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된 ‘Pro Quote Film Initiativen’총회를 열어, 영화 및 미디어 영역에 50% 여성 비율 달성을 목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 평등한 예산 집행’, ‘영화 및 미디어 분야 성 평등을 위한 중앙 상담 및 서비스 센터 설치’ 등을 요구해 왔다.

1년 후, 2019년 베를린영화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에 대해 독일 언론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은 “결과적으로 여성 감독의 작품이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영화제 전체 프로그램 중 37%가 여성 감독 작품이었으며, 총 17편의 경쟁 부문 작품 중 7편이

5) 작성: 홍희정(울산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6) 작성: 채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여성 감독 작품이었다. 이는 지난해 18개 경쟁 부문 작품 중 네 작품만이 여성 감독 작품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한 결과다. 또한 ‘독일 영화TV 아카데미’ 지원으로 여성 영화감독 작품을 상영하는 특별 섹션도 마련됐다. 사진작가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 바바라 롬 감독은 “경쟁부문 작품 중 여성이 카메라 촬영을 맡은 작품은 2개에 그치는 등 여전히 카메라 작업이나 프로덕션과 같은 영역의 여성 비율이 크게 낮지만, 변화가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에는 여신의 이름을 딴 ‘테미스(Themis) 상담 센터’가 문을 열었다. 17개의 영화 및 미디어 업계 조직이 힘을 모아 문을 연 센터에서는 산업 내 근무 현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를 겪은 이들을 위해 법적·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주는 센터 요청이 있을 시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하며, 정규직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 캐스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여성도 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센터의 이사회는 영화감독과 변호사 등 여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테미스 센터’ 운영은 독일 연방 문화미디어부와 독일 공영방송사인 ARD와 ZDF에서 지원한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여러 여성 감독을 비롯한 산업 종사자들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평등’과 ‘다양성’ 주제가 전년도보다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미투 논의에 대한 성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참고문헌 •

https://www.tagesspiegel.de/kultur/frauen-auf-dem-filmfestival-wie-hat-metoo-die-berlinale-veraendert/23970992.html?fbclid=IwAR2fMVesp2EuWCd65Alq8VhS2ARqC3pvu96ALcS5nVmt4S_aT3-EWU5XvOg
<https://www.medienboard.de/ueber-uns/>

독일 베를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공휴일 지정⁷⁾

독일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여성 투쟁의 날(Frauenkampftag)’이라 부른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의 의의와 의미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여전히 투쟁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베를린 시의회 내무성위원회가 법 개정안에 동의한 데 이어, 1월 24일 베를린 주의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를린은 세계 여성의

7) 작성: 채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날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독일 최초의 주(州)가 되었다. 베를린 주의회에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결정하기까지는 수개월 동안 긴 논의가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베를린 주가 다른 주보다 공휴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시작했다. 베를린 주 공휴일은 지금까지 총 9일로, 독일 연방 내에서 공휴일이 가장 적다. 이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이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1월 9일, 3월 혁명의 날을 기념하는 3월 18일, 종전날인 5월 8일 등 여러 당에서 제안한 다양한 날짜를 두고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사회민주당(SPD)의 제안에 따라 좌파당(Linke)과 녹색당(Grüne)이 3월 8일을 공휴일로 추진하는 데 찬성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추진하는 데 반대도 있었지만,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한 사회민주당과 좌파당, 녹색당은 이번 결정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베를린에서 여성 파업을 준비 중인 ‘베를린 여성 파업 준비위원회(Frauenstreik-Komitee Berlin)’의 알렉스 위시네스키(Alex Wischniewski)는 독일 언론 ‘타츠(Taz)’ 기고를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대다수 여성이 임금 노동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참고문헌 •

<https://www.taz.de/Archiv-Suche/!5565267&s=marz/>(검색일:2019년 1월 24일)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9/01/berlin-innenausschuss-beschliesst-neuen-berliner-feiertag-am-8-maerz.html> (검색일:2019년 1월 22일)

독일, 개정된 낙태법에 대한 비판 이어져⁸⁾

독일 내각이 낙태 ‘광고’를 금지하는 독일 형법 제 219a조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앞으로 의료진과 의료 기관에서 낙태 수술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독일에서는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와 병원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낙태 수술 시행 여부에 대해 웹사이트에 공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의사 협회는 낙태 수술을 실시하는 의사와 병원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사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과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낙태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이에

8) 작성: 채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더해 독일은 지금까지 형법 제 219a조에 따라 의사가 낙태 수술 시행 여부는 물론 낙태 수술 과정과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Werbung)’도 금지해 왔다. 사회민주당, 녹색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형법 219a조 폐지를 주장했지만 CDU(기독교민주당)/CSU(기독교사회당) 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형법 219a조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로 일부 내용만 개정됐다. 앞으로 여성들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수술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당국과 상담 센터, 그리고 독일 의학 협회와 상담해야 한다. 이에 219a조 폐지가 아닌 일부 내용 수정에 그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넬리스트 마가레트 스토크프스키는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 기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 승인으로 얻은 것은 거의 없으며,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별다른 진전 없는 상태에 다시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진들이 인터넷에 낙태 수술 여부를 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낙태 수술에 대한 과정과 위험 등 여성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리는 ‘광고 금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비판했다. 독일에서 많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을 의사나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비판했던 헤넬 의사의 항소는 부족하게나마 일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결정이 오는 4월, 한국에서 이뤄질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문헌 •

<http://www.spiegel.de/kultur/gesellschaft/abtreibungs-werbeverbot-warum-spricht-keine-rueber-gebaerheid-a-1251628.html>

<https://www.dw.com/en/german-cabinet-approves-revised-abortion-law/a-47382601>

<https://www.dw.com/en/court-rejects-appeal-by-german-doctor-fined-for-advertising-abortion/a-45867098>

아일랜드 정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추진 계획 발표⁹⁾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11월 초, 여성교수(women-only professorial positions) 채용 목표제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아일랜드 내 대학에서 45명의 여성교수를 채용하는 이번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아일랜드 대학 내 교수 인력 비율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우선 2019년 9월까지 15개 교수직 채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2021년까지 45명 전부 채용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

9) 작성: 박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젝트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인데, 약 4백 7십만 유로(한화 약 6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총 7개 대학으로 구성된 아일랜드 대학협회(Irish Universities Association, IUA)는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협회 소속 대학 모두 이번 행동계획 보고서의 제언에 공감하며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이행에 필요한 정부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아일랜드 법에서는 젠더를 기반으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만 교수직 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를 위반한다는 해석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동계획이 이제 막 발표된 만큼, 앞으로 아일랜드에서 실제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 Gender Equality Taskforce (2018), "Gender action plan: Accelerating gender equality in Ir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ttps://www.education.ie/en/Publications/Policy-Reports/gender-action-plan-2018-2020.pdf> (검색일: 2018년 1월 21일)
- The Irish Times, "Women-only professorial posts will work," (2018년 11월 15일)
<https://www.irishtimes.com/opinion/women-only-professorial-posts-will-work-1.3697691> (검색일: 2018년 1월 21일)
- University Observer (2018), "Irish Government to fund women-only university positions," (검색일: 2018년 11월 21일)
<https://universityobserver.ie/irish-government-to-fund-women-only-university-positions/> (검색일: 2018년 1월 21일)



[여성가족부]

‘분야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운영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관련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090

교육과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사회 실질적 성평등 실현한다

여성가족부는 중앙과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지역양성평등센터 4개소를 개소해 시범 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14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전국 87개 여성친화도시 “마을 단위 성평등 정책” 추진한다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87개소로 증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1.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166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 준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 시행계획 마련·추진

- ①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② 함께 돌봄 체계 구축, ③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 ④ 가족의 일·삶의 균형, ⑤ 가족정책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145

체육계 미투 관련 폭력예방교육 점검·컨설팅 본격 실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중 체육계 관련 공공기관 등 100여개 기관에 대하여 폭력예방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145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153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키로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2.0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173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간편해진다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2.1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188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1.9%, 378개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별 참여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8년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은 2017년(40.2%) 대비 1.7%p 상승하여 41.9% 기록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2.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35

제6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개최

그간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대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회 개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3.0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20

성평등 사회를 향해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전진합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2019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과제를 누구보다 앞장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3.0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32

여성가족부 장관,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11일(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접근'을 의제로 열리는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3.0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32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쓰기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최근 연예인 등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메시지를 발표하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3.1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41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2개월 연장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13.]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7364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14.]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376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22.]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7491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2.12.]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73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발간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 및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발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2.27.]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916

[고용노동부]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 명 돌파!

2018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지난해와 비교하여 46.7% 증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 2018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9,199명으로 지난해(90,110명)와 비교하여 10.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23.]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78

중소기업맞벌이 가구를 위한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확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02.07.]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08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18.9.10.~'19.1.9.) 총 122건이 접수, 지난 2년간에 신고된 총 101건('17년 39건, '18년 62건)보다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02.14.]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18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19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환영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1.16.]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3711>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 받아 구성하며,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1.22.]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3721>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22일 위원장 긴급 성명 기자회견에서 밝힌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발족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2.01.]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3750>

방송정책 및 심의 기구 성불균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다양성 조사항목 확대를 권고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2.07.]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3755>

임산·출산 고려하지 않은 근무평가기준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 또는 출산휴가 등 임신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2.11.]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376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 T/F』 출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성평등 T/F」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9.02.14.]

• 참고문헌 •

<https://www.betterfuture.go.kr/PageLink.do#LINK>

[통계청]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 기록 [통계청 보도자료, 2019.02.27.]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336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